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통합신당 추진단 누가 들어가나 ▶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폭발 ▶9
홍명보호 '월드컵 로드맵' 확정 ▶1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694호 1판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음력 2월 11일)

호남 시도지사 공천룰, 통합신당 성공 시험대

광주시장·전남지사 예비후보 9명 이해따라 천차만별
민심과 동떨어진 공천안 제시땐 갈등·혼란 불가피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공천 룰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만드는 통합 신당의 성공적인 출범 여부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10일 통합신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로 나설 9명의 예비후보와 입지자들에게 공천 룰에 대한 입장을 들은 결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선호하는 경선 방법이 제각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달 말 출범할 통합 신당이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천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 새정치의 동력이 반감하면서 지방선거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입지자들의 공천 룰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소속에 따라 크게 갈렸다.

다음 주 광주시장 도전을 천명할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의장과 이석형 새정치연합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공천 룰에 '통합 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이 실질적으로 당원이 없다는 점에서 공천 룰에 당원 참여가 포함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공론조사식 배심원제 등 경선에서의 조직 동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은 경선 구도와 판세에 따라 각기 다른 셈법을 보였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당원 경선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며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시민 경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이용섭 의원은 경선이 인물 및 정책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직 창당이 되지 않은데다 경선 룰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병완 예비 후보는 '복수 후보 공천제'를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광주의 정치적 특성상 통합 신당의 공천은 곧 당선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 통합 신당이 예비 경선을 실시해 복수 후보만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통합신당 복수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방법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무공천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전남지사 후보 입지자들의 공천 룰에 대한 입장도 엇갈렸다.

주승용 의원과 이낙연 의원은 통합 신당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당원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원들에게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는 12일 전남지사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당원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 100% 국민경선제 도입이 상식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록 의원은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과 함께 전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심원제 도입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부터 통합신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공천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보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 재발방지 대책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사와 기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대형 해킹 사태를 낸 KT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 부총리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시 고려할 점은 기존의 법체계와 어떻게 되는지와 소비자 필요성 등 전반적 균형을 봐야 하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대책만 나온 데 대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통신·의료·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주민번호 보안과 관련해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번호 연구반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다른 인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번호 암호화가 의무화되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어떤 범위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KT 해킹 사태에 대해 "KT 회장이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롯데 등 재벌 계열사의 정보 공유와 관련해 "앞으로는 영업목적의 계열사 간 공유는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간 정보 공유는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새학기 앞둔 대학서점 북새통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내 서점에서 새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이 산더미 처럼 쌓인 서적 앞에서 전공·교양 교재 등을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朴대통령 유감 표명…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태 일파만파…국정원 사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의 파장이 확산하는 조짐이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국정원의 사과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의한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자칫 국기문란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도 발표문 자료를 통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공방도 연일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철저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이 사건을 정치공세화하지 말라며 방어선을 친 반면 야권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및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수사를 방해하는 불순한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국정원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개입 댓글 사건은 지난 정부의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현 정부와 현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0여명의 수사팀을 국정원 청사에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